

총 평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한양공고 앞에 가서 여러분을 뵈었습니다.

사실 어제 밤부터 내리는 비와 메르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시험장 가는 길이 무겁지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다행히 날씨가 개었고, 열심히 합격노트를 보며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합격을 향한 강한 열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학 문제는 잘 푸셨죠?

오늘 문제를 보면서 저는 행정학 강사로서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강사는 본인이 열심히 강의한 내용이 고스란히 시험문제에 반영될 때, 그리고 제자들이 좋은 성과를 얻었을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7,9급 문제 모두 제가 그동안 수업 중에 강조했던 출제의 포인트가 그대로 살아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주의깊게 보시면 출제된 문제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자체가 저와 함께 연습했던 모의고사와 거의 동일함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을 열심히 함께했던 수험생들은 아마 제 목소리가 시험치는 내내 귓가에 울리지 않았을까?를 기대해봅니다.

저의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성과로서 그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2주후 지방직 시험에서 다시 뵈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한 드림

출제유형분석

총론	4	재무행정론	3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4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2	지방행정론	3

0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 ②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 ③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 ④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해설 ② [×]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은 신공공서비스론이 아닌 신공공관리론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구 분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 및 인식토대	• 초기 사회과학이론	• 신고전파 경제이론, 성과관리론	•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 복합적
합리성과 인간행태	• 개괄적 합리성 • 행정인	•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 경제인	• 전략적 합리성 • 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
공 익	•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 개인 이익의 총합	•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대응대상	• 고객과 유권자	• 고객	• 시민
정부역할	• 노릇기(정치적으로 정의된 단일 목표에 초점을 둔 정책설계와 집행)	• 방향잡기(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 봉사(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집단이익의 협상과 중재)
책임성확보	• 위계적	• 시장지향적	• 다면적
행정재량	• 공무원에게 제한된 재량 허용	• 목표달성을 위한 폭넓은 재량	•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 수반
조직구조	•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	• 분권화된 조직	• 리더십이 공유되는 협동적 조직
동기유발	• 보수와 편익, 공무원 보호	• 기업가정신	• 사회봉사, 사회이익에 기여하려는 욕구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172~174

▶ ②

02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기회의 흐름
- ② 만족모형 - 행정인(administrative man)
- ③ 조직과정모형 - SOP와 프로그램 목록
- ④ 최적모형 - 초합리성 강조

해설 ① [×]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의사결정 참여자의 흐름이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248, 249~250, 252~254, 254~255,

▶ ①

03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 ② 일반적으로 포크배럴(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 ③ 도로, 다리의 건설,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④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해설 ① [×] 집행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분배정책보다 규제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분배정책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의 배분 / 포크베럴, 로그롤링 현상이 발생 · 수출 특혜 금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주택자금 대출, 국유지 불하, 농민을 위한 영농정보 제공 등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 / 계급대립적 성격으로 치열한 갈등 · 누진소득세 제도, 영세민 취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등
규제정책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① 경쟁적 규제 : 다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 방송국 설립인가, 항공노선 허가 ② 보호적 규제 : 일반 대중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구성정책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 /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영향이 없지만, 대내적으로 게임의 법칙발생,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나타냄. ·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 조정 등
추출정책	정책적 목표에 의해 국민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 조세, 병역, 물자수송, 노력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
상징정책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및 국민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나 상징과 관련된 정책 · 88 서울올림픽경기, 2002 한·일월드컵경기, 남대문복원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184~185

▶ ①

04 살라몬(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 수단 분류'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 수단은?

- ① 조세지출
- ② 정부출자기업
- ③ 사회적 규제
- ④ 정부 소비

해설 ④ [○] 살라몬은 행정 수단이 제공하는 산출물과 그것을 전달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정책도구를 제시하였는데 정부소비와 공기업이라는 수단은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직접 제공하는 전통적인 도구로서 가장 직접성이 높은 행정수단이다.

		직접성('누가')	
		직접적	간접적
강제성 (어떻게)	강제적	- 조직 : 정부조직, 조직개편 - 권위 : 규제 - 자금 : 벌금, 정부보험 - 정보 : 정보공개	- 조직 : 공기업 - 권위 : 자율규제 - 정보 : 조사위원회
	협력적	- 자금 : 보조금, 직접대출, 바우처 - 정보 : 기반 광고, 캠페인	- 조직 : 시장조직, 가족·지역사회, 계약 - 권위 : 자문, 컨설팅 - 자금 : 간접대출, 손해책임법

직접성	행정수단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 가능성	정당성 (정치적 지지)
낮음	손해책임법,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바우처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중간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낮음/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보험, 직접 대출, 경제적 규제, 정보 제공, 공기업, 정부 소비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183 / 한문제를 잡아라! 특강 15번 문제

▶ ④

0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 ②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④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 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해설 ① [×] 신공공관리론에서 정부의 역할인 방향잡기까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② [×]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다.
 ④ [×] 신공공관리론은 규제 완화를 제시한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148~155

▶ ③

06 신고전 조직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 ②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
- ③ 비경제적 요인과 비공식집단의 중시
- ④ 의사소통과 참여의 중시

해설 ② [×] 계층적 구조와 분업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는 것은 고전적 조직이론이다.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사회적 인간관, 사회적 능률성과 비공식적 관계 중시, 경험적 과학성, 폐쇄적 환경관의 특성을 갖는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312~313

▶ ②

07 다음 중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 ① 지방소득세
② 담배소비세
③ 취득세
④ 지방교육세

해설 ④ [×]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시의 보통세이다.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구분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도세	시·군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832~833

▶ ④

08 월슨(J.Q.Wilson)은 정부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

구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	㉡
	좁게 집중	㉢	㉣

- ① ㉠ 대중적 정치 - 각종 위생 및 안전 규제
② ㉡ 고객정치 - 수입 규제
③ ㉢ 기업가적 정치 - 낙태 규제
④ ㉣ 이익집단 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해설 ㉠ - 대중정치, ㉡ - 고객정치, ㉢ - 기업가적 정치, ㉣ - 이익집단 정치
㉠ [×] 각종 위생 및 안전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이다.
㉡ [○] 수입규제는 고객정치의 상황이다.
㉢ [×] 낙태규제는 대중정치의 상황에 해당한다.

ㄹ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는 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는 규제로 편익은 집중되어 있고 비용은 분산되어 있는 고객정치에 상황에 해당한다.

구 분		규제의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규 제 비 용	넓게 분산	• 대중정치 : 편익, 비용모두 분산 • 수혜자 : 집단행동의 딜레마 • 비용부담자 : 집단행동의 딜레마 ⇒ 규제에 대한 정치적 위험과 논란이 적음 · 음란물 규제, 낙태규제 등	• 고객정치 : 편익은 집중, 비용은 분산 • 수혜자 : 규제의 집행을 촉구 • 비용부담자 : 집단행동의 딜레마 발생 ⇒ 규제의 강력한 이행 · 수입규제, 직업면허 등
	좁게 집중	• 기업가 정치 : 편익은 분산, 비용은 소수 집중 • 정책선도자들이 시민의사를 결집하여 추진 • 수혜자 : 집단행동의 딜레마 발생 • 비용부담자 : 규제의 집행에 강력히 저항 ⇒ 규제의 느슨한 집행 · 환경오염규제, 퇴폐업소단속 등	• 이익집단정치 : 편익 집중, 비용 집중 • 수혜자 : 규제의 집행을 촉구 • 비용부담자 : 규제의 집행에 강력히 저항 ⇒ 서로의 이익확보를 위해 대립. 규제 정책의 가시성이 높음. · 한·약분쟁, 의약분업규제 등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27~28

▶ ②

09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체계와 행위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 ②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공유재 이론 등이 있다.
-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변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해설 ④ [×]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심각한 경제위기, 전쟁 등 역사적 전환점에 주목하고, 제도변화는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매우 급격하고, 간헐적으로 일어난다고 본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137~143

▶ ④

10 엽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 ③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 ④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해설 ④ [×] 엽관주의는 행정의 안정성 저해, 정치적 중립의 저해, 전문성 저하의 단점을 갖는다. 엽관주의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436~437

▶ ④

11 관료제 병리에 관한 연구 내용과 학자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굴드너(Gouldner) -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
- ② 굿셀(Goodsell) -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 ③ 머튼(Merton) -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 ④ 셀즈닉(Selznick) -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 체제 간 이해관계의 지나친 분극을 초래한다.

해설 ② [×]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은 피터의 원리이다.

인간적 발전의 저해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법규우선주의, 비개인적 역할관계는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저해하며, 성장과 성숙을 방해
목표대치 - 머튼(Merton)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의 강조로 과잉동조 현상과 목표와 수단의 대치현상이 빚어짐.
훈련된 무능 - 베블린(Veblen)	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준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경우 변동된 새로운 조건에 적응시키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임.
변문옥레(red-tape)와 변동에 대한 저항	구조의 경직성 및 법규·절차준수의 강조, 문서주의는 변문옥레를 악화 시킴. 또한 쇄신과 발전에 대해 저항적임.
권력구조의 이원화와 갈등	상사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능력이 이원화되어 갈등과 조직 내 비효율을 유발
권위주의적 행태의 조장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기준, 공식적 규범의 엄격한 준수 등이 관료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조장.
무리한 세력팽창 - 관료 제국주의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증대시킴
관료를 무능화하는 승진제도 - 피터(Peter)의 원리	관료제의 규모가 커지면 승진의 기회가 확대되고 무능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됨.
부처할거주의 - 셀즈닉(Selznick)	권한위임과 전문화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전체의 목표보다 자신이 소속된 부서만을 우선시하는 편협한 태도를 취하게 됨.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339

▶ ②

12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집행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 ② 버만(Berman)은 집행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 ④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해설 ③ [×]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닌 재량적 실험가형에 해당한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완전히 통제하는 유형으로 결정자들은 형식상의 결정권만을 소유하고, 집행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과 목표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고전적 기술자형	① 정책결정자 :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세부 정책내용까지 결정 ② 정책집행자 : 세세한 기술적 문제 정도에서만 미약한 재량권 행사
지시적 위임형	① 정책결정자 : 정책목표와 대체적인 방침수립 ② 정책집행자 :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 받음
협상형	① 정책결정자 : 정책의 목표를 설정 ② 정책집행자 :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을 벌임 ③ 집단의 힘과 협상력의 정도에 따라 주도권이 결정
재량적 실험형	① 정책결정자 :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 수준에 머뭇.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② 정책집행자 : 정책목표의 구체화, 수단 선택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
관료적 기업가형	① 정책결정자 : 형식상 결정권을 소유 ② 정책집행자 : 정책과정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형태로서 결정권까지도 행사.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264~274

▶ ③

13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성론적 접근법은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 ② 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 ③ 상황론적 접근법에 기초한 이론의 예로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 하우스(R.J.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 ④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이 거래적(transactional)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해설 ① [×] 특성론적 리더십은 지도자 개인이 갖는 자질 및 특성에 따라(업무의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하에 개인의 속성과 자질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395~405

▶ ①

14 상황론적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 ②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조직환경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③ [×]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조직을 환경적 결정에 피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보는 접근방법이다.

환경인식 분석수준	결정론 : 조직은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	임의론 : 조직은 환경에 대한 독립변수
개별조직	체제구조적 관점 ① 구조적 상황론	전략적 선택관점 ① 전략적 선택이론 ② 자원의존이론
조직군	자연적 선택관점 ① 조직군생태학 이론 ② 조직경제학	집단적 행동관점 ① 공동체 생태학 이론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359~362

▶ ③

15 다음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B :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① A : 예산 단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단일의 원칙
 ③ A : 예산 통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④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통일의 원칙

해설 A - 예산총계주의 원칙(완전성 원칙), B -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전통적 예산원칙(Nuemark) : 통제중심, 입법부 우위>

원칙	내용	예외
공개성의 원칙	국민들에게 공개!	국가정보원 예산 등
명확성의 원칙	이해하기 쉽고 단순·명확해야!	총액계상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미리 국회가 의결!	전용, 사고이월, 준예산, 긴급명령, 선결처분
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이 일치!	적자 or 불용액의 발생
한정성의 원칙	① 목적 외 사용금지	이용과 전용
	② 계산된 금액 내 집행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③ 회계연도 독립	이월, 계속비, 앞당기어 충당·사용
단일성의 원칙	가급적 단일회계 내에 정리!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통일성의 원칙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금지!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완전성의 원칙	모든 세입·세출이 나열되어야!	전대차관, 순계예산, 수입대체경비, 기금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579

▶ ④

16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 개념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②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③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④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해설 ① [×]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OO 담당)
직 무 분 석	직류 (sub-series)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행정직렬내 일반행정직류와 재정직류)
	직렬(series)	직무 종류가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 (행정직군내 행정직렬과 세무직렬)
	직군(group)	직무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행정직군, 기술직군)
직 무 평 가	직급(class)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난이도·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행정 9급, 세무 9급)
	직무등급 (grade)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9급)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463

▶ ①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집행자로 하여금 보다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계속비
-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 ③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 ④ 예산의 이체(移替)와 이월(移越)

해설 ② [×]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집행의 통제 확보방안이다.

<예산의 집행 : 통제 확보방안>

예산배정·재배정	① 배정 : 기획재정부 장관 ⇔ 각 중앙관서의 장 ② 재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 산하 재무관
회계기록·보고	각 중앙관서는 기획재정부에 월별·분기별·결산 보고
정원·보수 통제	정원·보수 변경 시 해당부서·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 협의
계약 통제	「국가계약법」 상 일정액 이상 계약 시 상급기관 승인
예비타당성 조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 대상사업은 중앙관서 장의 신청 or 직권으로 선정
총사업비 관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변경 시에도 동일함.

<예산의 집행 : 신축성 확보방안>

참고 ▶ 2015 compass 행정학 p.643

▶ 추가경정예산

- ① 편성횟수제한 ×, 예산팽창의 원인이 됨.
- ②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하나 일단 성립하면 전체로서 실시됨.
- ③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 i)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ii)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변화, iii) 법령에 따른 지출의 발생이나 증가 시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595

▶ ①

20 우리나라 주민 직접 참여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③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④ [×] 주민소환의 대상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816~825

▶ ④